



# 공정정보도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03143) 서울종로구율곡로2길25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이주영·공보위간사 임화섭

www.newsunion.co.kr

우리는 각자 고백합니다.  
이런 기사에 내 이름이 달려서 나갔다는 게 부끄럽다고.  
이런 기사를 쓰라고 시킨 것이 부끄럽다고.  
이런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순순히 따른 것이 부끄럽다고.  
이런 기사에 후배 이름을 달아 내보낸 것이 부끄럽다고.

이번 특보에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중 몇몇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아서 취재했는데, 정작 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쓴 기사였는데, 바이라인에 표시된 기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글자 무더기로 둔갑해서 송고됐습니다.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야 하느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이런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쓰였습니다.

뭔가 쟁기는 일을 하거나 시키는 경우가 몇 번 반복되면, 힘들지만 해야 할 일조차 점점 마뜩잖아집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오해를 받

지나 않을까 해서 멍청하게 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지시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멍청거림도 의심도 썩김도 모두 사라져 버린 경우조차 종종 목격됐습니다. 흔히 '확신범'이라고 하지요.

이런 와중에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전혀 다르지만, 위에서도 걱정하고 아래에서도 걱정합니다.

밖에서는 면전(面前)에서 대놓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고, 옆에서 수근거리면서 등 뒤에서 우리를 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해다'라고 항변하고픈 때도 있지만, '정말 오해일 뿐이냐'고 되물을까 두려워 확실히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짐합니다.  
일단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하지도 시키지도 말자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자고.

## 국민 분노 잇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의도된 방관'에서 적극적 '부당지시'까지...연합뉴스의 민낯

돌이켜 생각해볼 때 그것은 의도된 방관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 타사의 잇따른 특종 보도를 지켜보던 일선 기자들은 애가 달았다.

의혹 보도는 출처가 여러 '나와바리'에 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한 출입처에서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그런데 의혹 보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워싱턴에 물어도 별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의혹을 직접 파고들어 발굴한 보도 역시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직접 '미르·케이재단'이 언급된 지난해 10월 20일까지 연합뉴스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단독 보도한 기사는 2건에 불과했다. <이승철 "미르·K스포츠,기업의견 모은 아이디어...靑 개입 없어">, <시민단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차은택 고발>.

언론사들이 너도나도 특별취재팀(TF)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경영진도 불안했는지 그제야 국정농단 의혹 TF를 발족한다. 주요 언론사 가운데 가장 뒤늦은 출발이었다.

팀원들의 고군분투 속에 좋은 기사도 나왔지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층

취재를 하며 제보자를 관리해온 타사를 연합이 뒤따라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TF와 다른 부서 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또 시간이 갔다.

게이트 국면이 본격화하자 워싱턴은 편집권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정권의 개'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검찰은 예상을 깨고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도 검찰발 기사를 중심으로 국정농단 의혹 보도를 속속 내기 시작했다.

보도가 늘자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편집권이 부활했다. 11월 20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회부장은 부원들에게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와 최순실 등에 관한 공소장은 모두 '일방적 주장'이니 수사결과 문장에 모두 따옴표(" ")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반론과 해명도 충실히 넣으라고 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잘못된 지시는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검찰 수사결과 발표 기사는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따옴표 없이 작성한다. 왜 하필 그때 피의



2면에 계속

2016년 12월 '파도 치는 촛불민심'

# 전국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 정부 부실대응은 '축소' 국민불안은 '경시'

환자 수 186명, 사망자 수 36명. 격리자 수 1만6천여 명.

2015년 사회를 뒤흔든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숨가쁘게 일하던 기자들은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전달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정부의 작은 방역 실수는 포용하고 감염병 퇴치 노력이나 국내 의료진의 높은 수준은 되도록 부각하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회사와 정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정부 측의 공식 톤다운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사실상 공정보도를 포기하라는 말에 기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런 지시에서 벗어난 기사는 데스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흐리멍덩한 기사로 바뀌기 일쑤였다.

당시 국민의 비난여론이 빗발쳤던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을 꼬집는 기사는 잇따라 삭제됐다.

뒷북 대응을 지적한 <메르스 범정부대응도 '뒷북'...총리 공백에 리더십 부재> 기사는 킬됐다. IT 의료과학부에서 작성한 기사가 청와대·총리실 대응까지 시각의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런 이유로 기사를 죽였다면 정작 '큰 틀'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한 기사가 별도로 나가지 않은 것은 왜인지 의문이 남는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야 병원명을 공개한 것을 지적한 기사에서는 '뒤늦은' 대책이라는 표현이 데스크링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시 정부 대책을 정리한 스트레이트 기사는 작성 단계에서 <병원 공개·스마트폰 위치 추적...뒤늦은 메르스 강공>이라는 제목으로 늦은 대응을 지적했지만, 데스크링 후 나간 제목은 <병원 공개·격리자 위치 추적...메르스 대책 초강수 선회>로 무뎠다.

정치부에서 범정부 대응을 짚은 기사에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부제목에 넣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사측 해명이었다. 그러나 2천자짜리 해당 기사에서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두 문장에 불과해 이 해명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튿날 조간 중앙일간지 대부분은 1면을 털어 일제히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정면 비판했으니 정부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데스크링이 결국 연합뉴스 기사를 '물먹인' 셈이다.

한 환자는 사망 후에야 메르스 감염자로 드러났다. 당국의 방역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락이 데스크링 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수 천명에 이르면서 모든 방역 대책이 뒤늦었는데도, 기사에 '뒤늦다'는 표현이 언급되면 수정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 찾아가 주민의 환영을 받았다는 식의 철 모르는 보도자료나 내는 등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나 연합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편집위에서 사측이 내놓은 공식 해명 중 하나는 "메르스가 큰 질병은 아니었는데 국민이 너무 오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은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고 대통령은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했다는 맥락의 발언이었다.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지적됐다.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운 수많은 기사가 삭제됐고, 무뎠다.

시간이 흘러 메르스도 환자 수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 수는 1만6천여명의 기록을 남기고 종식을 향해 갔다. 그 당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

투를 벌이던 마지막 환자의 사망 소식은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이 기사의 제목은 이 모든 난장판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당시 단독 기사의 제목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 숨져...6달여 만에 메르스 '제로'>였다. 환자의 사망을 기다리더라도 한 것이냐는 독자들의 항의와 비난이 쏟아진 이 '메르스 제로'라는 표현은 데스크링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결국 포털고침으로 제목을 바꿔야 했다. 문제가 되자 사측은 "신문 다수가 메르스 제로나 종식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을 잊은 취재 지시와 데스크링에 대형 사건 앞에서 밤낮없이 뛰던 일선 기자들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연합뉴스의 신뢰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도, 반성도 없다.

1면에 이어

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일까.

정연국 당시 청와대 대변인 역시 그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말없어도 서로 뜻이 통했던 것일까. 편집위에서 사측은 양쪽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뒷맛은 썼다.

어렵게 취재한 단독 기사에 대한 '물타기' 지 시도 있었다.

특검취재팀은 3월 6일 특검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공소장을 미리 입수해 하루 전인 5일 새벽 엠바고를 달아 시리즈로 기사를 올렸다. 공소장에 담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사마다 관련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반영해 '밸런스'를 맞추라는 주문이 떨어졌다. 송고 시점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당일인 6일 오전으로 늦춰졌다. 기사를 일부러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짙어졌다.

이들 보도는 YTN이 5일 새벽 '공소장 단독 입수' 보도를 내보낸 뒤에야 부랴부랴 데스크링을 거쳐 뒤늦게 송고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태 보도와 관련해 '물타기식' 데스크링은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애써 작성한 기사를 아예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의약품 구매 2배로 급증> 종합 기사는 IT의료과학부장의 데스크링을 거치며 <이명박 정부도 유사 프로포폴·마늘주사 구매>란 제목으로 바뀌어 송고됐다. 제

목이 바뀌며 기사의 본래 취지는 사라졌으나 편집위에서 사측은 MB정부 때 이런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이 '왜 기사가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박 전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시민 반응을 취재한 기자가 <시민들은 '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 <시민·민간단체 평가 엇갈려>로 바뀌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 기사는 개별 처리하지 말고 오후에 전국종합으로 묶어 처리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전국종합기사는 종합기사대로, 지역 기사는 지역 기사대로 뉴스가치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연합뉴스에서 시국 관련 지역 기사를 축소 보도한 꼴이 됐다.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 사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카드뉴스 <영혼을 앗아간 최면술사 '스벵갈리'>는 송고 1시간 만에 아예 삭제된 경우다. 사측은 삭제 이유에 대해 "자극적인 데다 최면술 적용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 빗댔다"는 점을 꼽았다.

공보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연합뉴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한다.

처음에는 의도적 방관으로, 그다음에는 적극적인 부당 지시 형태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진의 왜곡된 현실 인식에 있겠지만, 중간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르기보단 오히려 증폭시켰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기자들의 몫이 됐다.

# 외국어 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니?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것은 쓰지 마라.”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연합뉴스 외국어뉴스를 총괄한 외국어에디터는 이런 취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외국어뉴스 부문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와 함께 일선 기자들의 사기는 하락했고 연합뉴스 외국어뉴스 서비스의 신뢰도에는 의문이 증폭했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영문뉴스, 영문경제뉴스부, 다국어뉴스부는 외국인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한국 뉴스를 세계로 전달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 아래서 ‘균형 있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은 외면하는 것’으로 둔갑했고, ‘공적기능 수행’은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사만 작성하는 것’으로 왜곡됐다.

한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작성 기자의 역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TV드라마 ‘태양의 후예’ 기사는 계속 작성 지시가 내려와 관련 영문기사는 지난해 4월 한 달 80여 건이나 송고됐다.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쓴 경제기사에 대해서는 왜 한국경제가 안 좋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지적했다. 경기둔화로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에 대한 피쳐(feature) 기사 <S. Korean youth look overseas in search of better lives>는 송고된 이후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이란 이유로 작성자와 고객사에 설명 없이 삭제됐다.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고 국내에서 국문 기사로 여

러 차례 다뤄진 내용인데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연합뉴스의 영문 기사를 국가이미지 홍보에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깊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기능 수행은 공정성에 발판을 두고 있을 때 가능하다.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는 정부 구독료와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정부 예산을 받지만,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사만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련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연합뉴스 외국어뉴스는 공적기능 수행을 핑계로 그간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동영상 의혹과 관련 영문기사가 단 한 건도 송고되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예이다. 국내 영자신문과 일부 외신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연합뉴스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영문뉴스도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을 때 기사를 내보내곤 하지만 이건희 동영상 사건은 예외였다.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다루지 않은 데 대한 사측 해명은 “영문뉴스는 외국통신사 서비스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쓰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기사를 쓸 시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국익에 좋지 않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사회를 뒤흔들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축소성 지시가 내려왔다. “JTBC 보도가 조작됐을 수도 있는

것,” “외국 독자들은 최순실 사태에 관심 없다,” “전형적인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다” 등 부서 회의에서 나온 에디터의 발언은 기자들의 탄식을 일으켰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정당 반응을 위주로 기사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최순실이 혐의를 부인하고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가 조작일 수도 있다는 사건을 기자들에게 피력했다.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쏟고 중요하게 다뤘던 사안을 황색 저널리즘으로 치부했으며 최순실 기사에 대한 ‘피로감’이 많으며 많이 읽는 다른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데스크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보수 진영의 논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내부 지적도 잇따랐다.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기사에 녹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의 코멘트는 삭제됐다.

이런 발언과 지시가 사태를 축소보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사측의 해명은 ‘팩트에 기반해 균형 있는 시각’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말한 ‘팩트’와 ‘균형’이 독자와 국민이 보는 ‘팩트’와 ‘균형’과 같은지는 의문이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잊혀진 것이 아닌지 기자들의 자괴감은 깊어졌다. 독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외면당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많은 외국어뉴스 기자들이 여전히 이 시기를 ‘암흑기’로 한탄하고 있다.

## 이재용은 “광고로 압력 안줬다” 선언 먼저 고개숙인 연합뉴스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고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광고를 풀어 언론을 등에 업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고, ‘구시대의 매듭’을 풀자는 한 의원의 채근 끝에 나온 답이었다.

그러나 정작 구시대의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은 언론이었다. 연합뉴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는 법조 기사를 쓰며 그에 관한 언급이라도 할 수 있음은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

삼성이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이를 언급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송고된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이사 단독 인터뷰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기사였다.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일성신약의 윤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합병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대주주 오너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많은 것을 저버렸다”며 삼성 오너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지만, 이 문단은 데스크 과정에서 사

라졌다.

기사 송고일 저녁에는 취재기자가 아닌 부장이 작성한 종합 기사가 송고됐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이창섭 편집국장 직무대행은 “밖에서 삼성을 돕는 사람들”로 지칭되고 있었다.

2016년 9월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때 회사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 편을 들었다.

현장 기자는 삼성 갤럭시노트7 대리점 출하 중단, 갤럭시노트7 국내 사용중지 권고 등을 단독 취재했다. 그러나 기사는 시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송고되지 않았고, 분량마저 줄어들었다.

# “요즘 연합 왜 그래?”

## ‘바른 언론’ 어디 갔나...선정·자극적 보도 남발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타사 기자들의 민망한 질문 세례에 수년째 시달리고 있다.

새로운 팩트를 찾을 수 없는 기사에 [단독]을 표기해 한동안 비웃음을 샀다가, 아무리 봐도 추가된 내용이 없는 기사가 제목만 바뀐 채로 송고되기 일쑤였다.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제목, 불필요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제목,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제목들이 ‘B2C’라는 명목하에 양산됐다.

지난해 4월 27일 <비혼이 대세?...외국 처녀라 야 딱지때는 농촌총각엔 상처> 기사가 출고됐다.

이 기사는 즉시 인터넷에서 확산되며 광범위한 논란을 일으켰다. 비혼추세와 농촌의 결혼난을 엮은 기사의 야마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외국 여성을 농촌 미혼남성의 입장에서 성적대상화 했다는 점, ‘딱지를 떼다’라는 비속어를 기사제목에 사용했다는 점 등이 두루 지적을 받았다.

‘총각 딱지’ 기사로 대표되는 문제적 보도들은 사내의 지나친 포털 순위 집착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애초 기사 중간에 들어 있던 ‘총각딱지’ 표현은 처음에는 부제로, 종합 기사에는 제목으로 올라갔다. 작성자가 이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데스크에 비속어임을 알렸으나 그대로 송고됐다.

작성자는 “데스크가 포털노출 때문에 제목 다

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포털노출에 대한 압박을 받는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토로했다.

‘포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기사 제목만 바꾼 종합기사를 송고하기도 했다. 이는 곧 국가간통신사의 어뷰징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3월 20일 전국부장은 “오후들어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을 새롭게 할 것 있으면 새롭게 종합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동보를 보냈다. 비슷한 주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평범한 스케치성 기사에 [단독]이 표기된 것도 사내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 [단독] “국산가격의 절반이잖아요”...마트서 모로코 문어 고른 40대 주부(2월 5일) ▲ [단독] ‘이젠 혼자서 보편이다’...밥도, 여행도, 영화도, 노래방도(1월 31일) ▲ [단독] “아등바등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잖아요”...복권방앗 80명 장사진 (1월 22일) 등이다.

성인잡지의 칼럼에 쓰일 법한 단어들인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건사고기사 제목에도 등장했다.

‘클릭 유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저급함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신체부위·속옷·추행·성폭력 등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있는데도 ▲ 팬티·브래지어...여성 속옷 1천400점 훔친 30대 검거 (2016년 8월 22일) ▲ 후임병 속옷에 손 넣어 주무르고 만지고...20대 징역

형 (2016년 7월 26일) ▲ ‘가슴 만지고 입맞춤’ 男초등교사 회식자리서 여교사 4명 성추행(2016년 4월 12일) 등으로 썼다.

사측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독자 친화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최소화시키고 뉴스콘텐츠 사용자로부터 관심을 받는 노력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대책을 말하는 데 그쳤다.

기사의 본질을 왜곡한 제목 달기로 독자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이 2015년 11월 26일 송고된 <한국에 ‘헝그리정신’이 사라졌다...노동의욕 61개국중 54위>라는 제목이다.

‘2015 세계 인재 보고서’를 인용해 두뇌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제기한 이 기사의 제목에는 임상혁 전경련 상무가 한국의 노동자 의욕이 낮은 원인으로 난데없이 지목한 ‘헝그리정신’이 들어갔다. 거기에 ‘사라졌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사의 본질을 무책임하게 왜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험악했다. 한 네티즌은 “내가 갖겠다 해야 헝그리 정신이지, 남이 가지라고 하면 협박”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거나 인턴, 비정규직, 열정페이로 일하는 사람 천지인 나라에서 저게 할 말이냐”고 꼬집었다.

### ☞ 3면에 이어

<갤노트7 판매중단에 흥채인식 생태계 확장도 제동>, <갤노트7 부품 업체들, 리콜 사태로 실적악화 우려> 등 해설 기사마저 제동이 걸렸다.

사측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을 다루는 기사를 ‘무차별적인 삼성 때리기’로 몰았다. 사측은 편집위에서 “삼성이 우리나라 대표기업이고 삼성 실적에서 휴대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마녀사냥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점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관련 기사의 ‘킬 사건’이었다.

작년 7월 한 독립언론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 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됐다. 실제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동영상은 어떻게 찍혔느냐.

동영상과 관련한 기사는 줄곧 성실히 처리됐고, 종종 [단독]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단독’ 기사인 <檢 “동영상 속 행위 ‘성매매’ 맞다” 결론...이건희 기소중지> 기사는 킬 됐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성매매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사였다.

그러나 오후 5시45분에 작성창에 올라온 이 기사의 상태는 수십 번 DDH(보류)로 변모하더니 같은 날 자정을 17분 앞둔 시각에 DDK(킬)로 변하고 말았다.

일선 기자들의 반발로 뒤늦게나마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기자들은 허탈했다. 송고된 기사는 제목과 부제에서 ‘성매매’란 어휘가 빠졌고 실제 행위에 관한 기술은 삭제된 상태였다.

당시 사회부장도, 이후 편집위 사측 위원들도 킬과 톤다운에 대해 같은 이유를 내놓았다. “식물인간 상태인 이건희 회장 얘기를 다시 꺼내 욕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삼성이 ‘초상집’인데 굳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야 하느냐.”

### 제보가 공정보도를 살립니다

공보위는 불공정보도 사례를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취재 및 기사작성 지시와 데스크 뿐 아니라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공보위원들과 노조 집행부를 통해 제보하시면 되고, 노조 제보메일(nojjobo@gmail.com)을 활용하셔도 됩니다.